



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저자 |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 정경진



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2026.7.30. 전략기술정책센터 정경진 연구위원

요약문

□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재로 인한 우량기업 소멸 위기와 공공 R&D 기술이전 정체라는 이중 구조적 위기에 직면
-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 236만 개 중 후계자 부재 기업이 67.5만 개(28.6%)에 달하며, 이 중 73.8%가 비수도권에 소재하여 지역 경제·고용 기반 약화 우려
-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이 2021년 50.8%에서 2024년 34.5%로 급감하는 추세로 신규 확보 기술 약 71.1%가 사장되어 R&D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 창출의 구조적 한계 심화
- 현행 M&A·창업·사업승계 관련 지원 정책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 별로 분산 운영되어 인수창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정책 연계가 미흡한 상황
- 창업지원 통합공고 규모가 '26년 3조 4,645억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계는 신설, 일반창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어 인수창업 전용 트랙 및 단계별 안내·연계 미흡
- 딜 소싱*, 자금조달, 교육 등 인수창업 전 단계에 걸쳐 구조적 병목이 누적되어 있으며, 중개 불신(41.1%), 담보 중심 금융심사, M&A 실무 교육 부재 등이 거래 활성화의 핵심 장애 요인
* 딜 소싱(Deal Sourcing): 투자하거나 수주할 만한 거래 기회(deal)를 발굴·발견하는 활동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제3자 승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플랫폼·금융·교육을 패키지화하여 인수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모델 설계가 필요
- 미국의 중소기업 보증대출인 SBA 7(a)(최대 5백만 달러)는 Search Fund 생태계*를 결합하여 개인 주도 인수창업 경로를 제도화하였으며,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자리매김
* Search Fund: 젊은 기업가(Searcher)가 투자자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을 인수·경영하는 독특한 투자·창업 모델
- 일본은 전국 47개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를 원스톱 창구로 운영하여 2024년 제3자 승계 약 2,132건을 달성하였으며, M&A 지원기관 등록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중개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결론 및 시사점

- 민간 플랫폼의 AI 매칭·기술력과 정부의 자금·공공데이터·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민관협력 (PPP) 방식의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 정부는 자금·공공데이터·제도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은 AI 매칭 엔진·플랫폼 운영·보안 인프라를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 설계 필요
- 딜 소싱, 자금, 기술이전, 교육, 정책지원, 커뮤니티 6대 핵심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탐색-매칭-자금조달-기술이전-인수-인수합병 후 통합-성장에 이르는 인수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비수도권 제조 기반의 기업 매물 발굴 및 전국망 딜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공기술 이전 및 창업 육성을 위해 기술은행(NTB)의 공공기술 API 개방과 연계하여 인수 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로를 상시 연결 필요

1 서론

□ R&D 성과 정체와 지역경제 약화의 구조적 이중 위기

- 정부 R&D 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출의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어 투입 자본과 노력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악순환 고착
- 공공연구소 기술이전율이 2021년 50.8%에서 2022년 38.4%, 2024년 34.5%로 급감하는 추세로 신규 확보 기술('24) 40,045건 중 이전되지 못한 기술 28,458건(약 71.1%)이 사장되어 R&D 투자 효율성 저하
- 기술이전 건수가 대학은 '23년 대비 증가(6,138건 → 6,369건)한 반면 공공연구소는 감소(5,938건 → 5,218건)하여 기관 유형별 이전 역량 불균형과 함께 기술-시장 수요 간 연결고리 단절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은 상황

〈표 1〉 연도별 기술이전율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연구소	40.8%	50.8%	38.4%	36.3%	34.5%
대학	31.1%	33.3%	26.7%	26.0%	25.6%
전체	35.5%	40.9%	31.7%	30.2%	28.9%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후계자 부재율이 28.6%에 달하면서 우량 흑자 중소기업의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지역 고용·제조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는 이중 충격 우려

- 경영자 60세 이상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3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 CEO는 자녀부재·승계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실정
- CEO 설문에서 후계계획에 대해 '모름'(25%), '없음'(20.4%) 응답이 상당하고, 후계계획 없는 기업의 일부는 폐업까지 고려하여 기업 가치 하락과 지역 고용 기반 약화 우려 동시 확대

[그림 1] 우리나라 이중 위기 구조



□ 인수창업의 정책적 역할과 전략적 의의

- 인수창업(ETA)*이란 창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로 승계를 앞둔 기업을 예비 창업자 등이 인수하여 자신의 역량을 접목해 재도약시키는 창업 방식을 의미(기존 기업의 자산·인력·시장 기반을 승계하여 창업자의 역량을 접목함으로써 기업을 재성장)

* 인수창업(ETA):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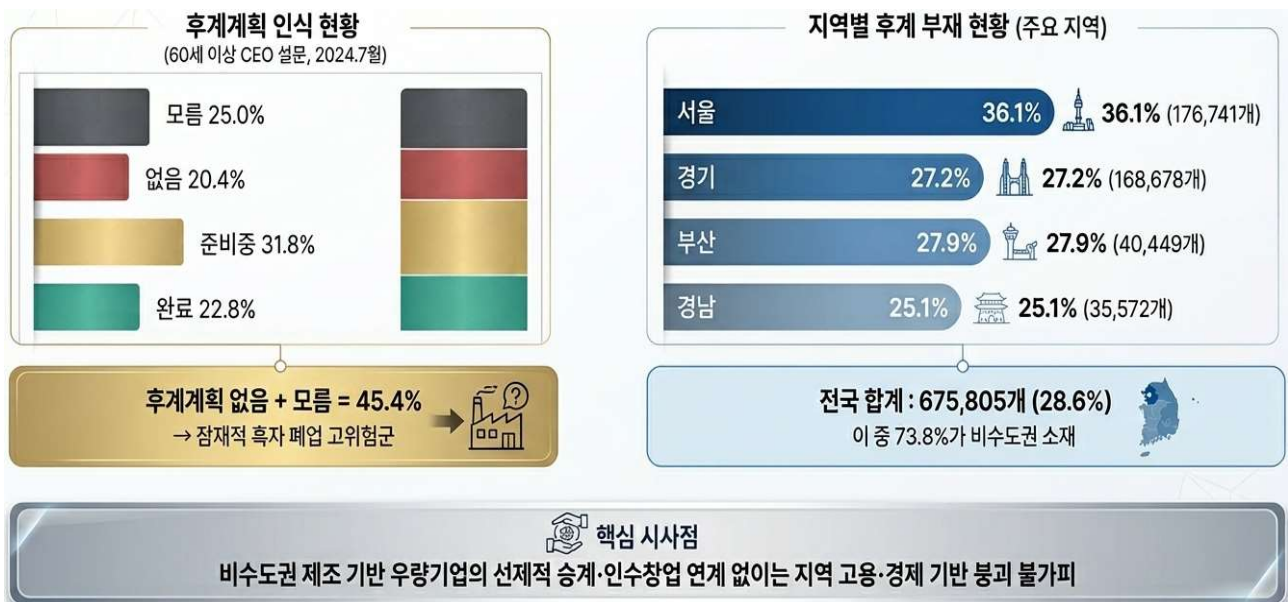
- 인수는 주식 인수·자산 인수·사업 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기업의 경영권 또는 자산을 이전받아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新창업과 달리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현금흐름, 고객, 인력을 인수 시점부터 활용 가능하여 실패 위험이 낮고 즉시 매출·고용 유지가 가능하며 혁신 기술의 빠른 사업화 경로 확보 가능
- 인수창업은 기술이전을 제고, 고용보전, 지역경제 안전망이라는 복합적 정책 목표를 단일 수단으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혁신 정책 도구로 주목
- ※ 인수창업은 'R&D 성과의 사장'과 '우량기업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적 해법
- 공공 R&D 기술을 피인수 기업에 이식하는 'AI-Rollup' 방식을 통해 국가 R&D 투자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공공 기술이전율(현 3%)을 10% 이상으로 제고하는 혁신 경로로 활용 가능
- 우량 흑자 중소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축적된 제조 노하우·숙련 기술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고용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 수행 가능
- 인수창업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인수창업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 인수창업 시장의 현황과 병목

□ 수요 측면: 승계 압력의 급팽창

- 기업승계 M&A 수요가 현재 21만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씩 증가하여 2034년에는 31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승계형 인수 수요에 대한 대응 압력이 증가
- 소상공인을 제외한 고용효과가 큰 기업 1.3만 개와 해당 기업의 고용 규모가 26만 명을 감안할 때 승계 실패가 대규모 고용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어 선제적 정책·금융·인프라 설계가 시급
- 2034년에 전망되는 31만 개 기업의 잠재 거래량이 급팽창하고, 단계별 지원·정보·금융·교육 연계 수요가 동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 당장 통합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수요 폭증 시 대응 능력 부재 상황에 직면할 우려

[그림 2]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 현황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5),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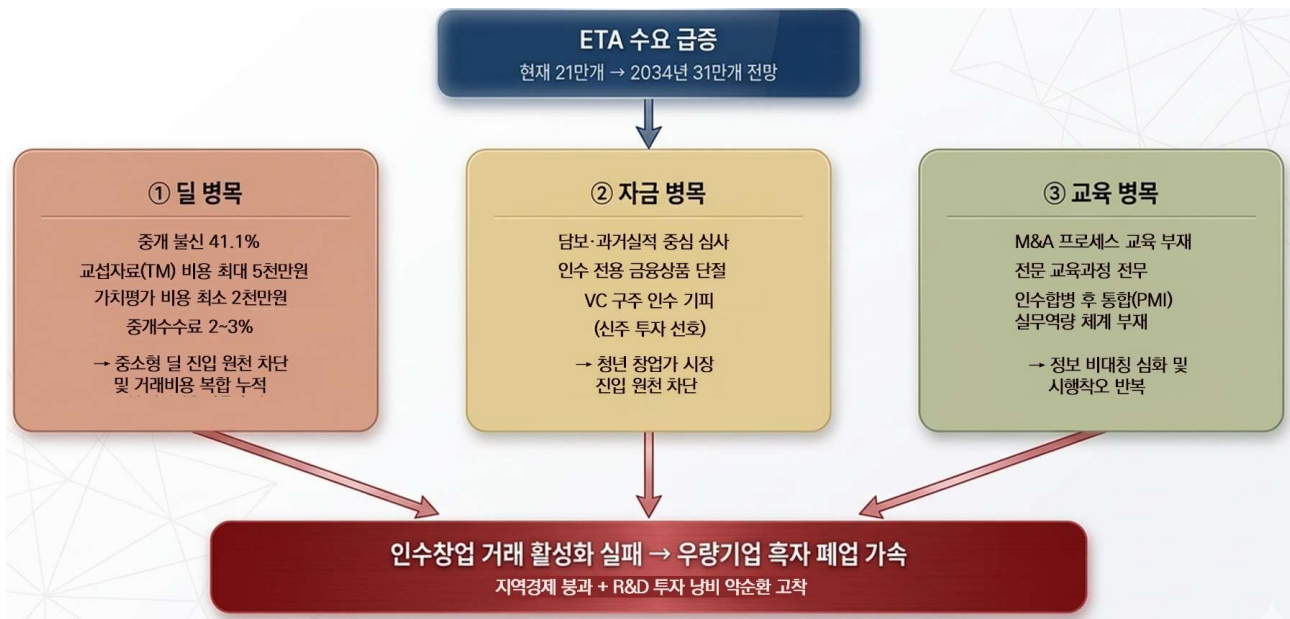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현황(주요 지역)

지역	중소기업수(전체)	60세 이상	후계 부재율	후계 부재기업
서울	1,666,401	489,589	36.1%	176,741
경기	2,110,760	620,141	27.2%	168,678
부산	493,459	144,978	27.9%	40,449
경남	482,366	141,719	25.1%	35,572
합계	8,042,726	2,362,953	28.6%	675,80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5),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 공급 측면: 딜·자금·교육 3중 병목

[그림 3] 인수창업 시장의 3중 병목 구조



- (딜 병목) 고비용 오프라인 중개 구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중개 기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중소형 거래의 진입이 제약되는 구조적 병목이 심화·지속되는 상황
 - 중개업체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한다' 8.8%에 비해 '신뢰하기 어렵다'가 41.1%로 불신 우위가 형성되어, 중개 불신이 기업가치 평가 불안·분쟁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협상 장기화, 거래 포기 가능성을 동시에 확대
 - 교섭자료 비용 최대 5천만 원, 가치평가 최소 2천만 원, 실사 3천만 원, 중개수수료 2~3%가 결합하여 중소형 딜의 거래비용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자금집행 지연과 거래 포기 위험이 동시에 확대
- (자금 병목) 담보·과거실적 중심의 금융기관 심사 관행과 VC의 신주 투자 선호가 결합하여 인수 금융 공백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
 - 은행권이 담보·과거 실적 중심으로 심사하여 인수창업자의 역량·미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심사체계가 미흡하고, 인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인수금융 상품 공급이 사실상 단절되어 거래 성사를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 VC는 신주 투자를 선호하여 구주 인수 기반 인수합병과 투자철학이 상충함으로써 성장자본 유입이 제한되고, 정책금융도 피인수 기업의 담보력 중심 심사를 유지하여 자산이 취약한 창업가의 보증에 한계가 발생
- (교육 병목) 국내 창업교육이 아이디어 발굴·사업계획서·피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인수·운영에 필요한 M&A 프로세스·PMI 실무역량을 다루는 전주기 교육 체계가 부재한 상황
 - 기업가치평가, 실사, 주식매매계약 등 거래 핵심역량은 별도 전문훈련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 영역이나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정규 교육 과정이나 실전형 트랙이 전무

□ 정책 측면: 분산·분절 구조의 한계

- 현행 M&A 및 인수창업 지원 정책은 중기부·기보·신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 중기부 'M&A 정보망', 기보 'M&A 지원센터', 신보 'M&A 보증' 등 유사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창업가가 지원 수단을 별도로 파악하고 신청해야 하는 정보 탐색 비용과 행정 부담 과중

〈표 3〉 현행 M&A 지원 정책의 분산·분절 현황

기관	플랫폼/사업명	주요 기능	한계
중소벤처기업부	M&A 정보망	매물 정보 제공, 온라인 전문가 상담	인수창업 전용 트랙 부재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매도·매수 기업 매칭, 인수자금 보증	개별 운영, 타 기관 연계 미흡
신용보증기금	M&A 보증	합병·주식인수·영업양수 자금 지원	담보 중심 심사 구조 유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	자문기관 등록·기업가치평가 지원	지원 대상·규모 제한적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5),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기술보증기금(2024), M&A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신용보증기금(2024), 중소기업 M&A 보증 지원 현황;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4), M&A 지원센터 운영 안내

-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나, 범부처 통합 실행 플랫폼·인수금융 특화 체계·전주기 교육 등 핵심 실행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
- 특별법은 M&A 유형 기업승계의 정의, 지원기준 법제화,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인프라 구축과 비용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나 통합 실행 플랫폼은 부재

3 주요국 인수창업 지원체계 비교

□ 공통 특징: 제도·금융·플랫폼·교육의 패키지화

- 주요국은 인수창업(제3자 승계)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률·정책금융·디지털 플랫폼·교육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승계 위기를 사회적 기회로 전환 중

〈표 4〉 주요국 인수창업 지원체계 비교

구분	미국	독일(EU)	일본
핵심 기초	민간 주도+ 공공보증	민관 협력 플랫폼 기반	원스톱 공적 지원창구
주요 플랫폼	BizBuySell, Acquire.com	Nexxt-change (전국 거래소)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47개)
금융 지원	SBA 7(a)(최대500만달러)	KfW ERP 창업·승계 금융	경영승계원활화법 기반 특례금융
법·제도	SBIC, Main Street EO Act	기업승계 세제 지원 체계	유류분·소재불명 주주 특례
교육·인프라	HBS·Wharton ETA 커리큘럼	지역 상공회의소 자문 연계	M&A 지원기관 등록제·가이드라인

※ 출처: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24), SBA 7(a) Loan Program Overview;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3), nexxt-change Jahresbericht; 中小企業庁(2024), 中小M&Aガイドライン改訂版

□ 인수창업 도입 국가별 주요 특징

- (미국) 민간 자본 주도의 Search Fund 생태계와 대출 보증 프로그램(SBA) 정책금융이 결합되어 개인 주도 인수창업 경로가 제도화된 성숙한 시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Silver Tsunami'로 인해 소기업 소유권 이전 수요 급증 중
 - Search Fund는 1984년 이후 누적 성과지표(IRR 35.1%, ROI 4.5배)가 축적되며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정착하였으며, HBS·Wharton 등 주요 경영대학원의 ETA 전문 정규과정 운영으로 준비된 인수자(Prepared Searcher) 양성 체계 확립
 - SBA 7(a) 보증 대출은 기업 인수·소유권 변경 자금 활용을 명시하고 최대 500만 달러, 75~85% 보증비율로 민간 대출 위험분담 구조를 운용하여 자산 담보가 부족한 개인 창업가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결정적 금융 인프라 역할
- (독일) Nexxt-Change 공공 매칭 플랫폼과 KfW 정책금융, BAFA 자문보조를 결합하여 '거래 발굴-자금-자문'의 전주기 지원을 운영하는 기업승계형 인수창업 정책체계를 구축·운영 중
 - Nexxt-change는 연방정부·상공회의소·경제단체·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전국 단위 기업승계 거래소로 은퇴 경영자-예비 인수자 매칭과 지역 파트너 기반 상담·연계를 제공하며 2027년까지 62.6만 개 SME 승계 지원 계획
- (일본)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후계자 부재 대응을 위해 제3자 승계(M&A)를 정책수단으로 정립하고, 법·공적 창구·거래규범·보조금 패키지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여 2024년 약 2,132건 (역대 최고) 달성
 - 전국 47개 사업 승계·인계 지원센터를 원스톱 창구로 운영하여 상담→매칭→민간전문기관 연계를 공적 시스템으로 표준화하고, '중소 M&A 가이드라인'과 'M&A 지원기관 등록제'를 통해 준수 선언, 등록취소 등 중개 품질 관리 장치 확립

□ 미국 Search Fund 모델 vs 한국형 K-ETA 모델 비교

- 미국의 Search Fund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자본시장 성숙도·금융 관행·정책 의존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정부의 마중물 역할(보증·데이터 개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K-ETA 모델로 수정·보완이 필요

〈표 5〉 미국 Search Fund 모델 vs 한국형 K-ETA 모델 비교

구분	미국 모델(Search Fund)	한국형 K-ETA 모델	차별화 전략
딜 소싱	브로커 중심, BizBuySell	AI 매칭+ 지역 거점 (TP/CCEI)	폐쇄적 한국 시장 특성상 AI+지역 네트워크 결합
자금 조달	민간 서치펀드 + SBA 7(a)	프로젝트 펀드 + K-보증 패키지	기보/신보 특례보증+프로젝트 펀드 결합
기술 접목	경영 효율화 중심	기술 융합형 Value-up	NTB 공공기술 이식으로 제조기업 첨단화
교육	MBA 중심 엘리트 교육	실전형 부트캠프·자격 인증제	창업중심대학 연계, 인증 서처 제도 도입

※ 출처: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2023), 2022 Search Fund Study;

□ 한국 인수창업에 대한 시사점

- (정책 재설계) 인수창업을 신설창업과 구분된 별도 정책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ETA 특화 법·제도·플랫폼·금융·교육 체계를 전용 트랙으로 재설계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
- (PPP 모델 도입) 정부의 직접 구축 방식 대신 검증된 민간 플랫폼 기술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PPP)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의 시장 친화성·운영 효율성과 정부의 자금·데이터·제도 권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델 표준화 필요
- (인식 전환) '기업 사냥꾼' 이미지로 대표되는 M&A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여 인수 창업을 '안전한 창업·사회적 승계·고용 보전'의 긍정적 프레임으로 재정립하는 대국민 인식전환 전략 필요

4 K-ETA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K-ETA 사회적 승계 선순환 모델

- K-ETA 플랫폼은 1세대 고령 창업주의 검증된 자산(기업)과 신세대 혁신 창업가의 기술·역량을 연결하여 흑자 폐업 방지와 기술(답테크, 답사이언스 등) 기반 Value-up, Fast-Track 창업이라는 3중 선순환 효과를 동시에 창출

[그림 4] K-ETA 사회적 승계 선순환 모델



□ K-ETA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 구성

- K-ETA 통합 플랫폼은 외부 데이터 연동(Layer 1) → 통합 데이터 레이크(Layer 2) → 원스톱 서비스(Layer 3)의 3계층 구조로 설계되며, 민간 플랫폼과 범부처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데이터 허브 역할 수행

[그림 5]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아키텍처



□ 플랫폼 7대 핵심 기능

- 통합 플랫폼은 ETA 전주기를 커버하는 7대 핵심 모듈(딜 소싱·자금·기술이전·교육·정책지원·커뮤니티, 글로벌 확장)로 구성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의 제도·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표 6〉 K-ETA 통합 플랫폼 6대 핵심 기능 및 민관 협력 방안

기능	주요 역할	민관 협력 방안
① 딜 소싱	• 지역/업종별 매물 검색, AI 정밀 매칭, 가치평가	• (민간) AI 매칭 알고리즘·UI/UX • (정부) 지자체(TP/CCEI) 매물DB 연동
② 자금	• 인수금융 자동 산출, 보증/대출 원스톱 신청	• (민간) 딜 구조 설계, VC/PE 매칭 • (정부) 기보/신보 자동심사·IBK/산은 연계
③ 기술이전	• 기업 맞춤형 특허 추천, R&D 지원 연계	• (민간) 피인수기업 분석, 기술 수요 발굴 • (정부) NTB API 개방, 대학TLO 연계
④ 교육	• ETA 부트캠프, 온라인 실무 강좌, 자격 인증	• (민간) 실전 커리큘럼 개발, 멘토링 매칭 • (정부) 교육비 바우처, 창업중심대학 연계
⑤ 정책지원	• 법률/실사/에스크로 등 거래 안전망 구축	• (정부) M&A 실사·법률·회계 비용 바우처 • (민간) 에스크로·법률 자동화(Legal Tech)
⑥ 커뮤니티	• 성공 사례 확산, 생태계 문화 조성	• (정부) 성공 사례DB 구축·정기 포럼 • (민간) 은퇴CEO 멘토링·네트워킹
⑦ 글로벌 확장	• 크로스보더 M&A, 통합(PMI) 인프라 구축	• (정부) 크로스보더 특화 법률/규제 실사 바우처 신설 • (민간) 크로스보더 M&A 유동성 공급 채널 진화

○ 딜 소싱: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전국망 딜 파이프라인' 구축

- (문제) 민간 플랫폼은 수도권·IT 기업 위주 매물에 편중, 지방 소재 제조 기반 알짜 기업은 정보가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어 이를 발굴·연결하는 체계적 전국망이 부재로 잠재 거래 기회가 단절되는 상황
- (해결) 전국 19개 CCEI·테크노파크(TP)를 플랫폼의 '공식 딜 소싱 파트너'로 지정하여 지역 내 후계자 부재 기업을 전수 조사하고 매각 의사를 타진하여 1차 정보를 수집하는 현장 거점망 구축
- (AI 매칭 고도화) 창업가의 전공·세부 경력·보유 기술과 피인수 기업의 기술적 필요를 다차원 분석하여, 창업가 역량이 기업 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을 산출하여 매칭 성공률 극대화

○ 자금: 'ETA 특화 금융 패키지'의 플랫폼 내재화(Embedded Finance)

- (문제) 창업가는 신용·담보 부족으로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기존 정책자금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거래 기회를 놓치는 사례 발생
- (해결 ①) 플랫폼 내에서 딜 매칭·가치평가 완료 시 해당 데이터가 기보·신보의 심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중복 서류 제출과 별도 기초 실사를 최소화하는 원스톱 보증/대출 심사 시스템 구현
- (해결 ②) 정부 후순위 채권 보증으로 민간 은행 선순위 대출 참여를 유도하는 전용 상품 신설
- (해결 ③) VC·개인투자조합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펀드 탑재로 자금 조달 채널 다변화

○ 기술이전: NTB 연동을 통한 'AI-Rollup' 및 기술 사업화

- (문제) 산업부·KIAT에서 운영하는 NTB의 공공 특허기술과 민간M&A 매물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인수창업가가 기업 인수 후 적합한 혁신기술을 탐색·도입하는 경로가 단절되는 정보 사일로 지속
- (해결) 산업부 NTB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전면 개방하여 최적 공공기술을 AI가 자동 추천하고, 기업 인수와 동시에 NTB 등록 기술이전 시 기보 'IP 인수 보증' 자동 연계로 사업화 초기 자금 지원

○ 교육: 실전형 'ETA 부트캠프' 및 전문가 양성

- (4단계 커리큘럼) Search → Acquisition → Legal & Negotiation → PMI & Growth 단계로 인수창업 전주기 역량을 구조화하여 초보 인수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전문 교육 트랙 운영

〈표 7〉 K-ETA 커리큘럼(예시)

단계	주요 내용
① Track1(Search)	• 산업분석 방법론·우량 매물 선별·1차 딜 소싱 전략으로 탐색역량 강화
② Track2(Acquition)	• 재무제표 이면 해석·실전 실사 체크리스트·LBO·구조화 금융 설계
③ Track3(Legal & Negotiation)	• SPA 핵심조항·세무 최적화·신뢰기반 협상론으로 계약역량 강화
④ Track4(PMI & Growth)	• 100일 경영계획·조직문화 통합·NTB 기술 연계형 VValue-up 전략

- (인증제) 교육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창업가에게 '인증 서처(Certified Searcher)' 배지를 부여하고, 우량 매물 정보에 우선 접근권·보증심사 우대·수수료 할인 혜택을 연동하여 실질적 인센티브 구조 설계

○ 정책지원: 거래 안전망 구축

- (에스크로·바우처) 계약금과 잔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고 거래 종결 확인 후 지급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며, 회계·법률 실사 비용의 최대 80%(한도 2천만 원)를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으로 거래 진입 장벽 완화

○ 커뮤니티: 생태계 문화 조성

- 플랫폼 내 'ETA 성공 사례관' 상시 운영으로 인수창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가시화하고, 정기적 온·오프라인 포럼으로 매수자·매도자·투자자·금융기관·전문가 간 교류 플랫폼 상설화

○ 글로벌 확장: 범부처 통합(PMI) 인프라 구축

- K-ETA 플랫폼 내에 건설한 기업을 대상 유사 기업을 연속 인수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전략적 매각을 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딜 파이프라인 구축과 관련 법률/규제 실사 비용 바우처 신설

□ 민관협력(PPP) 추진체계

-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과 정부의 제도적 권한을 결합한 민관협력(PPP) 방식을 채택하여 플랫폼 기술·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고 자금·데이터·제도는 정부가 공급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 구축

〈표 8〉 K-ETA 플랫폼 민관협력 역할 분담

주체	역할	세부 내용
민간 운영사	플랫폼 기술·운영	• AI 매칭 엔진, 보안 인프라(FIPS 140-2), VDR, 에스크로, 전문가 생태계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총괄	• K-ETA 프로젝트 총괄, 규제 샌드박스 지정, M&A 바우처 예산 편성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데이터	• NTB 공공기술 데이터API 전면 개방, 기술이전 정책 연계
금융위/기보/산은	금융 지원	• ETA 전용 금융상품 가이드라인, 비대면 자동 보증 심사, 인수금융 대출 한도
국무조정실	범부처 조율	• 협력체계 조율, 사회적 승계 세제 혜택(구주 인수 세액공제) 검토
지자체·TP·CCEI	딜 파이프라인	• 후계자 부재기업 실태조사, 플랫폼 매물 등록 유도, 지역 창업가 보육
COMPA·대학TLO	기술·R&D 연계	• 인수기업 후속R&D 자금 지원, 대학기술-피인수기업 매칭

□ 단계별 추진 로드맵

〈표 9〉 K-ETA 플랫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Y1 상반기	• 민간 운영사 선정 및PPP 협약 체결, 범부처ETA TF 구성(중기부·금융위·산업부), 지역TP/CCEI 딜 소싱 매뉴얼 배포·교육	거버넌스 확립
2단계	Y1 하반기	• 공공 데이터(NTB·기업DB) 및 금융심사 시스템API 연동, 에스크로·법률 자동화 시스템 탑재, ETA 부트캠프 커리큘럼 개발	플랫폼 개발
3단계	Y2 상반기	• 부울경 제조 밀집 지역 시범 사업, 1호 성공 사례 발굴·집중 지원,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UI/UX 개선	베타 서비스
4단계	Y2 하반기	• 전국 확대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해외 크로스보더M&A 기능 추가(In/Outbound), ETA 전용 펀드 조성 확대	생태계 정착

□ 기대효과

- M&A 거래 활성화·기술이전 효율성 제고·지역 일자리 보전·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복합적 사회 혁신 효과를 기대하며, 국가 자산 소실 방지와 세원 유지·증대 효과도 함께 실현하고 IT 기반 글로벌 K-ETA 생태계 주도

- 인수창업(ETA)은 검증된 기존 기업의 자산·현금흐름·인력·시장 기반과 창업자의 혁신 역량을 결합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R&D 기술이전 정체와 우량기업 소멸이라는 구조적 이중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
- 특히, 공공 R&D 기술을 피인수 기업에 직접 이식하는 ‘AI-Rollup’ 방식과 결합할 경우, 사장된 기술을 즉시 사업화 가능한 산업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성과의 경제적 회수 구조를 확립하고, 공공 기술이전율을 구조적으로 제고하는 핵심 혁신 경로로 작동 가능
- 또한 인수창업은 신설창업과 달리 기존 기업의 사업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실패 위험을 낮추고 즉각적인 매출 창출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며, 기술사업화-기업 성장까지의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효율 창업 방식
- 나아가, 인수창업은 우량 흑자 중소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숙련 기술의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고용 기반 유지, 산업 생태계 연속성 확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 수행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 체계는 M&A, 창업, 기술이전, 금융, 교육이 기관별로 분산·운영 되어 인수창업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탐색-매칭-자금-기술-인수-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가 단절된 상황
- 이에 따라, 인수창업을 단순한 M&A의 하위 개념이 아닌 신설창업과 병행하는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재정의하고, 플랫폼 기반 통합 지원체계로의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 민간의 AI 기반 매칭 기술과 정부의 자금·공공데이터·제도를 결합한 PPP 기반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핵심 실행 과제이며, 딜 소싱-매칭-자금조달-기술이전-인수-PMI-성장에 이르는 End-to-End 인수창업 지원체계를 단일 플랫폼에서 구현할 필요
- 특히, NTB 공공기술 데이터의 API 개방 및 AI 매칭, ETA 특화 금융·보증체계, 인수창업 전문 인력 양성, 거래 안전망 구축, 전국 단위 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단순 거래 활성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수창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
- K-ETA 플랫폼 구축 시, 중소기업 M&A 활성화, 공공 기술이전 확대, 지역 일자리 및 제조 기반 유지, 청년 창업의 질적 전환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를 산업·고용·세수로 환류하는 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
- 결국, 인수창업은 사장된 R&D 성과와 기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국가 혁신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며,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에 기여 가능
- 향후, 한국의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K-ETA 플랫폼 확대 구축하여, 중점 협력국(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에 단계적으로 유·무상(EDCF·ODA)사업과 연계 활용 가능

참고1

- 중소벤처기업부(2026),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2025),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 중소벤처기업부(2025),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 국회(2025),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원입법)
- 중소기업연구원(2024), 중소기업M&A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연구원(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기술보증기금(2024), M&A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4), 국내 벤처투자 동향
- 창업진흥원(2024), 창업중심대학 및 CCEI 운영 현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2024), 국가기술은행(NTB) 운영 현황
- Harvard Business School(2023), Search Fund Primer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24), SBA 7(a) Loan Program Overview
-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2023), 2022 Search Fund Study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3), nexxt-change Jahresbericht; KfW(2024), ERP-Gründerkredit Startgeld Programm
- 中小企業庁(2024), 中小M&Aガイドライン改訂版
-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2024), 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成約件数報告

저자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 정경진 연구위원 (kjjung@kistep.re.kr, 043-750-2347)